

정부혁신 보다나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9 해양가장주간!
		배포일	2019. 6. 14.(금)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 과장 김창수, 사무관 명상순, 주무관 박명관 • ☎ 044)200-5300, 5301, 5302	
보도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6.(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6월 17일(월)부터 6월 23일(일)까지를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진행한다.

정화주간 중, 연안정화의 날*인 6월 21일에는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정화행사를 실시하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천변 쓰레기와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장마철, 태풍 발생 등을 앞두고 해양쓰레기 발생요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정화주간이 끝난 뒤에도 매월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매월 셋째주 금요일로 지정하여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실시(2018년 7월부터 시행)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5. 31. 울산)’에서 올해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5월 말 수립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토대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시행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정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방안 마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해양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여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 톤(초목류 포함, 제외 시 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매년 8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중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는 한 번 발생하면 해류 등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비롯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5.30),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 선포」(바다의 날 기념식, 5.31)와 연계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정화활동 실시 필요

□ 운영계획

- (주관/기간) 해양수산부·환경부 / '19.6.17(월)~6.23(일)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정화 행사 참여[6.21(금), 전북 군산 선유도]
- (참여기관) 관계 부처,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NGO, 일반 시민 등
- (추진내용) 해수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주관하여, 정화주간 동안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활동 전개
 - 관계 기관 등의 동원 가능한 장비·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범국민 참여 행사로 진행
 - * 환경부는 산림청·지자체 등과 함께 하천변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 수거
- (인센티브지원) 수거주간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국제연안정화의날(9월)에 우수 지자체 및 업·단체 포상 추진

참고 2

지역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행사운영 계획안

기관	행사 지역	주요 참여기관	참여인원 (명)
총 계	135개 지역 * 공단, 협회 등 유관기관의 각 지방청 협력행사 포함		12,705
부산청	7개 시·도·구·군 연안	지자체(부산시, 제주도 외 5개구), 지역해경, BPA 등 14개 기관 바다살리기운동본부 등 NGO, 지역 어촌계 등 13개 단체	220
인천청	6개 시·군·구 연안	인천시, 인천해역사령부, 중부해경청, IPA 등 14개 기관 선광 등 각 부두운영사, 인발협 등 126개 업·단체	445
여수청	8개 시·군 연안	지자체(여수시 등 5개 시군), 여수해경, YGPA 등 9개 기관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등 NGO, 지역 어촌계 등 6개 단체	70
마산청	7개 시·군 연안	지자체(창원시 등 7개 시군), 지역 해경서, 국립공원 관리 공단 등 11개 기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민간구조대, 어촌계 등 23개 단체	1,559
울산청	4개 구·군 연안	울산광역시, 울산해경서, UPA 한국재난구조단, (사)환경보호협회의 등 6개 업·단체	480
동해청	6개 구·군 연안	지자체(환동해본부 외 6개시군), 해군1함대, 육군 22사단, 동해해경청 등 12개 기관 지역자치위원회, 어촌계,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등 20개 단체	60
군산청	4개 시·군 연안 관리사각지대 1개소 * 군산시 고군산군도	지자체(군산시 등 4개 시군), 해경서, 새만금환경청, 한국 수자원공사 등 13개 기관 해양오염방제봉사자, 1사1연안 업체 등 40개 업·단체	500
목포청	10개 시·군 연안	지자체(목포시 등 10개 시군), 해군3함대, 목포해경서 등 15개 기관 현대삼호중공업, 남장방협회, 각 지역 어촌계 등 12개 업·단체	360
포항청	5개 시·군 연안	지자체(경상북도, 포항시 등 5개시·군), 해병1사단, 해군방어대대, 포항해경 등 6개기관, 공단,수협,바다살리기운동본부, 낚시어선협회, 부두운 영회사 등 18개 업·단체	505
평택청	4개 시 연안	지자체(평택·화성·안산·당진시), 해군2함대, 농어촌 공사 등 10개 기관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당진항항만물류협회 등 9개 업·단체	80
대산청	7개 시·군 연안	지자체(충남도 등 7개시군), 태안해경, 서산수협 등 16개 기관, 태안화력, 유화사, 해양수산단체 등 11개 업·단체	790
국립수산 과학원	7개 시·군 해안가	국립수산과학원(본원, 수산자원연구센터, 동해수산 연구소,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등 7)	200
해양 환경공단	12개 지사, 1개 센터	각 지방청 및 지자체 정화행사 협력 - 청항선, 크레인, 카고트럭 및 인력 지원 - 해양환경 이동교실(차량) 운영	249
한국어촌 어항협회	어항관리선 12척	각 지방청 및 지자체 정화행사 협력 - 어항관리선 이용 부유·침적쓰레기 수거 및 지원	370
수협 중앙회	전국 28개 시·군 연안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36개 회원조합 (사)제주올레, (재)환경재단 등 41개 기관	6,717
한국 해운조합	여객선터미널 주변	한국해운조합 지역본부(부산) 및 지부(인천 등) 13개 지사	100

* 참여기관, 행사인원 및 장소 등은 변동가능

참고 3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예시)



항포구 쓰레기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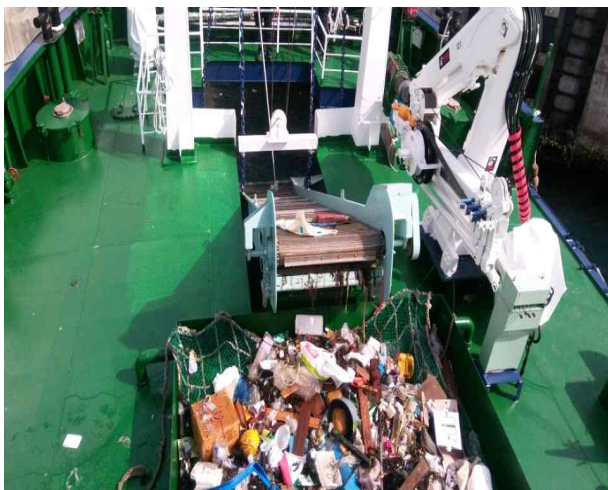
해안가 쓰레기 수거



침적 쓰레기 수거1



침적 쓰레기 수거2



부유쓰레기 수거



도서지역 사각지대